“금융 조직 개편안, 이해상충에 정책·감독 효율성 떨어질 것”

국민의힘 긴급토론회

교수 등 전문가 반대 논리 청취
22일 정책의총 통해 입장 정리
“경제부처 개편, 개악에 가까워”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대 논리를 청취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전체적인 정부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부처 개편안은 ‘개편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건전성과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대 특검 연장 법안을 완화해 처리하는 대신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 야당이 협조하는 합의를 했었으나, 합의가 여당 내 갈등으로 결렬됐으며,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 처리를 미룰 경우 민주당은 관련 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소비쿠폰 사업과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나 부채 누적형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며 “그래서 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권을 직접 장악하고 기재부의 통제와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 운영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로 다시 통합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책과 감독이 명확히 나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네 곳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기형적 구조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재부 개편을 두고 “기재부는 그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가채무의 관리를 포괄하며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며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예산 당국이 독립된 처로 분리될 경우 정치적 압력에 더 취약해질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 정책과 감독을 분리했던 근본 취지, 즉 관치 금융과 규제 포획 문제를 줄이고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려던 노력과 상충된다”며 “정책 부서는 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자와 같은 확장적 목표를 갖기 쉽고, 감독 부서는 부실이 나지 않게 대출을 조이는 안정 목표를 우선한다. 두 상이한 정책 목표가 한 조직 안에 섞여 있으면 스스로 만든 규제를 스스로 느슨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혁신·서민·주택·생산금융과 자본시장에서 관세 등 여러 대응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정책기능이 재정경제부로 가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은행·증권·카드·보험·보증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1만2000개가 넘고, 금융업에서 IT(정보기술)의 부분이 커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등 해외 금융이 들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체제로 가게 되면 감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 될 경우 감사원의 직무·회계 감사 때문에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도 ‘개인적 의견’을 전제하며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냈다.

오 팀장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단일 기구에서 하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해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다는 것이 (정부의) 논지”라며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 현장은 두 감독기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수의계약-경쟁입찰’ 줄다리기… 사업 지연 장기화 되나

〈방위사업청〉 〈민간위원〉

한국형 차기 구축함 표류

KDDX 사업자 선정 2년 넘게 지연
방산업계, 해군 등 전력 공백 우려

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이 2년 넘게 지연된 가운데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안건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사업 진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해군 전력 공백과 첨단 기술 적용 차질, 방산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전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이유로 오는 18일 열리는 제130회 분과위 안건에서 KDDX를 제외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당초 이번 회의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방사청은 올해 3월과 4월에도 같은 안건을 올렸으나 민간위원 의견 불일치로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달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KDDX 논의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된 이후 1년 9개월째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이다.

KDDX는 7조8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6000t급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형 사업이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이번 단계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로 사업 본격 착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방사청은 특정 업체를 바로 지정하는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민간위원들은 공정성을 이유로 ‘경쟁입찰’을 요구하면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업 진행이 계속 연기되면서 해군과 방산 업계 일각에선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지연은 곧바로 해군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은 지난 1998~2000년 사이 취역해 오는2028~2030년 사이 설계 수명을 다한다.

같은 시기 성급호위함, 초계함도 줄줄이 퇴역에 들어가 오는 2032년까지 최소 6척 이상이 전력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서해·남해·동해 3개 작전 해역에 전력을 분산 배치하고 있지만 구축함 공백이 30%에 달할 경우 각 해역별 최소 대응 전력 확보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구축함은 원해 작전과 다층 방어 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함의 공백은 곧 해상 통제력 약화로 직결된다.

해외 주요국도 유사한 사례를 겪었다. 영국은 Type 45 구축함 개발 지연으로 노후 Type 42 운용을 연장하고 호위함을 임시 투입해 공백을 메웠다. 미국은 줌월트급(DDG-1000) 개발 차질에 대응해 알레이버크급(DDG-51)을 추가 건조했고, 호주는 호바트급 구축함이 늦어지자 애들레이드급 호위함을 개량해 긴급 운용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빠르게 사업이 진행돼 추가적인 전력화 지연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지속되는 연기로 전력화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달 방추위 안건에서도 KDDX 논의가 빠진다면 사업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 해군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기중앙회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

중처법 완화 등 14개 과제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여기에는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형벌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형량 조정) ▲환경범죄단속법 처벌체계 개선(형량 조정)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규제 부담 개선(과태료 전환) ▲폐기물 과징금 산정기준(매출액 범위) 명확화(과징금 합리화) 등 14개 개선과제가 담겨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권칠승 의원)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선 “카페·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간판이나 배너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수인데 단순 변경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돼 생계에 큰 부담이다”라거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하다. 과징금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높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